

이주

이주민 건강과 공공성

2023. 10. 6.(금)

1부: 10:00-12:00

2부: 13:20-15:30

주관: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전남대 BK21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혁신인재교육연구단,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배경

2021년 기준, 한국은 200여만 명의 이주민이 있으며, 전국 71개 시군구의 이주민 비율은 약 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의 건강 취약성과 불평등한 보건 의료 접근성 문제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필요한 이주민은 환영받지만, 그렇지 않은 이주민은 경계 대상이 되는 현실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이민정책의 배제와 선택적 포섭을 넘어 전환기적 상상력과 실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민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의 문제이며, 공적인 의제로 모아가는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연대는 물론 이주민과 선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목표

1. 광주광역시 2016년 ‘외국인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광산구의 일부 민간병원과 이주민 대상 의료활동을 하는 NGO들(광주근로자 건강 센터, 광주 이주민건강 센터,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고려인 광주 진료소,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등)이 무료진료 서비스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이주민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갈등과 모순을 ‘건강 공공성’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적·실천적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중점 논의사항

1. 지역공동체의 주민으로서 이주민의 건강 실태와 수요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2. 광주지역 이주민의 무료진료 활동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3. 다인종·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4. 국제사회에서 이주민의 건강권(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에 대한 규범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해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논의한다.

